

☪ **국립대 발전계획안 발표**

교육부는 국립대 발전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지난 해 말 발표된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44개 인 국립대의 유사, 중복학과를 통폐합하고, 수도권, 강원, 충청, 전라,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제주 등 7개 권역별로 대학끼리 단과대나 학과를 교환하고 통폐합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장기적으로는 국립대가 권역별로 인사, 시설, 재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연합대학' 체제로 재편되고, 이를 위해 권역별 '국립대위원회(가칭)'가 설치된다.

국립대 특별회계제도는 예정대로 2002년부터 시행돼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이 보직교수 숫자를 늘려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총보직 한도제는 2001년부터 도입된다. 교육부는 금년 4월까지 국립대별 자체 발전계획과 구조조정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립대학발전위원회'에서 심사해 250억 원의 예산을 차등 배정할 방침이다.

**[국립대학 발전계획안]**

- ▲ 대학간 통폐합
- 학과 교환

-동일권역 내 대학간 유사학과 통폐합

-다른 권역 대학간에도 학과 교환 허용

▲ 권역별 연합대학체제 구성

-대학간 기능 분담 협력 유도

-인사·시설·재정 효율화 도모

-연합대학 총정원제 실시

▲ 국립대 특별회계제도 실시

-총액 한도에서 자율적 예산 운영(2002년부터 시행)

▲ 교수계약제·업적평가제 2002년부터 도입

▲ 총보직 한도제 2001년 시행

-보직교수 숫자 제한

☪ **지방대학 육성대책 발표**

교육부 지방대학육성대책위원회(위원장 박찬석 경북대 총장)는 지난 12월 26일 '지방대학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대 학생들에게 공평한 취업기회를 제공하도록 지방 대학 학생들에게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기업들에게 벌칙을 가할 수 있는 조항을 '고용정책기본법'에 신설하거나, 금년 상반기중 제정되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특별법(한시법)'에 규정하기로 했다. 또 지방대생의 취업을 돕기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지방대생 취업알선 센터'를 설치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대학의 노력을 행·재정 평가를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대 육성 대책을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중인 수도권과밀 해소대책과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해 수도권 대학의 신·증설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한편 산업대학의 정원 증원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 위치한 대학에 대해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하기로 한 방안을 철회하고 ▲개인의 사립 학교 법인에 대한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하며 ▲지방이전 대학에 대한 학교법인 재산에 대한 각종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8.8%에 불과한 지방대 학생 기숙사 수용률을 2005년까지 20%로 늘리기로 했고, 정부부처 위원회 구성 시 지방대학 교수 등 지방인사 참여율을 30% 이상 보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2002년부터 우수한 지방대 진학 학생에게 학자금과 생활비를 지원해 주기로 하고 해마다 지방대 우수학생 1,000명 가량을 선발해 학자금과 생활비를 1명당 연간 75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이며, 지방고교출신 우수학생들이 해당 지역의 대학 및 대학원까지 연계해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국비장학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 **대졸 유치원·특수학교 교사  
교대 편입학 권고**

교육부는 2000년부터 교육대의 학사 편입학 규모를 정원의 5%에서 20%까지 확대키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근거로 전국 11개 교육대에 대학에서 유치원이나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도 편입학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권고했다. 다만 2년제 전문대 유아교육과나 특수교육과 출신은 편입학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이나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교육대 편입학을 허용하면 초등 교사의 다양화·전문화에 도움이 된다"면서 "특히 초등학교 1·2학년은 유치원과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유아교육 전공자들이 필

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대들은 현행대로 4년제 대학의 중등 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편입학 자격을 제한할 움직임을 보여 권고안에 대한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 **구조조정 우수 국립대  
128억 원 지원**

교육부는 지난 '98년부터 추진해 온 44개 국립대의 구조조정과 내부혁신 성과를 평가한 결과, 학생수 1만 5천 명 이상인 대규모 일반 국립대에서는 전북대, 1만 5천 명 이하 소규모 일반 국립대에서는 공주대, 금오공대, 순천대를 우수대학으로 선정, 지난 12월 29일 발표했다. 산업대에서는 대전산업대, 진주산업대, 교대에서는 대구교대, 서울교대 등 총 8개 대학이 구조조정 및 내부 혁신 우수대학으로 선정됐

다. 또 총장 간선제를 국내 처음 실시한 한국교원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자상거래 프로그램을 운영한 상주대 등 2개 대학도 특정평가 과제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전북대는 유사학과 6개를 3개 학과로 통합하고 국비에산과 기성희예산, 기금 등을 통합한 통합결산제도를 시범 실시했고, 공주대는 전문대인 공주문화대와 통폐합하고 연구소 및 단과대에 평가를 통한 경쟁시스템을 도입했다. 금오공대는 22개 학과를 6개 학부로 통합했고 행정인력을 41명 감축했으며, 순천대는 국내 최초로 교수임용 이의신청제를 도입하고 54개 학과를 16개 학부로 통합하는 한편 보직수를 23개 줄였다.

이에 따라 전북대가 35억 원의 지원금을 받게된 것을 비롯해서

☾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구랍 23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현행	개정안
연금비용 부담률	공무원·정부 모두 7.5%	공무원·정부 모두 8.5%
연금지급 개시연령	20년 이상 근무자에게 연명 관계없이 퇴직 후 지급	2001년부터 50세 이상 지급, 2년에 1세씩 올려 2021년부터 60세 이상 지급
연금산정 기준보수	퇴직당시 최종월 급여액	퇴직 전 최종 3년간 평균 보수
연금액 인상기준	퇴직시 지급·호봉과 같은 재직자의 월급여액 인상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
고소득자의 연금감액	퇴직후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의 직에 취업한 경우 감액	민간기업 취업과 자영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감액(5년 후 실시)

▲공주대 21억 원 ▲금오공대 16억 원 ▲순천대 9억 원 ▲대전 산업대 25억 원 ▲진주산업대 6억 원 ▲대구교대 5억 원 ▲서울 교대 2억 원 ▲교원대 5억 원 ▲상주대 4억 원을 각각 지원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자체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41개 대학만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내년 이후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서울대, 목포해양대, 제주교대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돼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평가위원회(위원장 장수영 전 포항공대 총장)는 대학교수, 변호사, 컨설턴트, 산업계 인사 등 10명으로 구성돼 경쟁 및 인센티브 개념 도입정도와 운영시스템 개선실적, 내부혁신 추진 실적 등을 중점 점검했다.

## ☾ 2001년 학술연구 지원

### 기본 계획 발표

교육부는 1월 2일 인문학 및 기초과학 등 기초학문 분야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지난해보다 100억 원 많은 1,300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2001년 학술연구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초학문 분야의 '박사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 부설연구소에서 최대 3년간 연구에만 전념하면서 교육부와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학술연구 교수제'를 도입, 50명 가량을 선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5억 원의 예산도 책정했다. 1년 단위로 계약,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학술연구 교수의 급여는 연 2,400만~3,000만 원 선으로 해마다 연구 업적을 내야하며 연구소장이나 대학총장의 추천을 받지 못하면 중도에 탈락된다.

또한 국문학·철학·사학 등 인문학 관련 10여 개 분야별로 학회 추천을 받아 우수 논문 및 저술 5편씩 50여 편을 선정, 700만원씩 모두 3억 5천만~5억 원의 연구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방대 육성을 위해 지난 '97년 폐지됐던 지방대 교수 연구비 지원사업을 부활해 연말까지 30억 원을 별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술연구비 지원과 별도로 '기초학문 육성위원회'를 구성, 기초학문 육성방안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 ☾ 교사 군복무 경력

### 100% 인정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지난 12월 28일 최종 단체교섭을 열고 26개항의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 승진평가 때 지금까지 교사 임용후 100%, 임용전 88%만

인정해 왔던 군 복무경력을 앞으로는 임용전 경력도 모두 인정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여교사의 육아 휴직기간은 그동안 교육경력에서 제외돼 왔으나 이를 1년에 한해 보수나 경력상 재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정, 승진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시·도교육청이 교원자격 연수성적으로 최소 80점 이상을 주고 있어 과거 80점 미만을 받은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과거 성적이 80점 미만일 경우 이를 80점으로 재조정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선거 투·개표 등 교육외적 행사에의 교원동원 제한 ▲교원포상 확대 ▲교원종합연수원 설립 지원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따른 교원정원 증원 ▲주5일 수업제 단계적 적용 ▲제2외국어 담당교원의 부전공 자격연수 확대 ▲교원 해외유학제 도입 등에도 합의했다.

##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율화

교육부는, '97년부터 적용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대학이 정원 외로 뽑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방법을 자격 기준에 따라 2년 이상 외국에서 근무한 외교관이나 상사 주재원의 동반 자녀를 대상

으로 한 일반전형과 12년간 외국 수학자 전형 등으로 나누고 있으나 부칙에서 이런 기준들을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어 2002학년도 입시부터 기준이 자동 소멸됨에 따라 올해 치러지는 2002학년도 입시부터는 대학들이 자체기준을 세워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대상자를 선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5년 전부터 대학 자율이 예정된 사항인 만큼 예정대로 자율화를 시행하되, 최근의 부정입학 사태를 감안해 대학들이 합리적으로 자체 기준을 마련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1월말까지 전국 192개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전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에 따른 대학들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운영실태 파악결과에 따라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나 법 개정도 신중히 고려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의 부정입학 사태를 보면 어느 정도 법적 규제는 계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5년 전부터 대학 자율화가 예고된 사항이고 다시 규제조항을 만들 경우 범정부적인 '규제완화' 원칙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대가 '98년부터 예고기간을 두고 올해부터는 재외국민특별 전형

자격기준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하는 등 대학들 스스로도 자격기준을 엄격히 하거나 적어도 현행 기준은 지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장비 정보망시스템 가동

연구소, 대학, 산업체가 보유한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을 촉진해 장비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장비 정보망시스템이 가동에 들어갔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www.kbsi.re.kr 원장이정순)은 1월 4일 산·학·연 보유 연구장비공동활용을 위한 연구장비 정보망(KEOL: Korea Equipment On-Line)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산학연 관련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웹상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장비를 검색한 뒤 필요한 시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실적과 연구장비 사용에 따른 각종 강좌와 워크숍 등 교육 훈련, 기술자료, 신규 도입 장비와 불용 장비 안내, 신제품 등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농어촌 특별전형 2002년 부모동거 확인 의무화

교육부는 1월 12일 도회지에 사는 부모를 둔 학생이 농어촌 지역 고교에 다니면서 농어촌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2002학년도부터 대학 지원서에 학생과 부모의 동거 여부를 밝히는 항목을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고교장이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자를 대학에 추천할 때 부모와 같이 사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조치는 지원자나 고교가 서류상으로 처리하는 것이어서 학생과 학부모의 동거 여부를 실시하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편법 지원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사들이 부모와 학생의 동거 여부를 일일이 조사하려면 부담이 클 것"이라며 "학부모 단체나 교육 관련 시민단체 등과 함께 학부모 의식 개혁운동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최근 농어촌 특별전형 부정입학 논란과 관련해 "농어촌 특별전형에 합격한 일부 수험생이 위장 전입했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며 이들이 입학 자격을 갖추고 있어 입학 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 대학생 창업동아리

### 지원프로그램 제공

중소기업청은 대학생 창업동아리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동아리의 신규 발굴 및 창업아이템 개발지원 등 대학생을 미래기업가로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각 대학에서 활동이 우수한 창업동아리를 찾아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하는 대학생 창업동아리 신규발굴 사업으로 지난해 전국에서 80여 개 창업동아리를 선정하여 동아리당 최고 600만 원까지 창업활동에 필요한 제반시설 구입과 운영비를 지원했다. 올해에는 모두 1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창업아이템 개발지원은 창업동아리가 개발중인 사업아이템을 공모하여 우수 아이템을 선정해 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자금이 부족해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것을 막고 대학생들의 창업아이템을 사업으로 연결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지난해 200여 개 아이템을 선정하고 아이템당 최고 5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5월경에 창업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모두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동아리 대표들에게 방학기간을 이용해 국외 선진벤

처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대학생 창업자들이 가장 부족한 현장 경험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 벤처기업의 현장 견학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8월경 벤처경영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 견학을 실시할 예정이다.

매년 대학생 창업동아리 회원을 대상으로 한 '벤처창업스쿨'도 열고 있다. 올해는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동계 대학생 벤처창업스쿨'을 개최한 바 있으며, 오는 7월과 12월에 도 각각 창업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 국립대 행정조직

### 최고 31% 축소

교육부는 국립대 발전계획과 공공부문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4년제 국립대, 산업대, 방송대, 교대, 전문대 등 50개 대학 본부를 기존 427개과에서 340개과로 20.4% 줄이기로 했다. 24개 4년제 대학의 과는 311개에서 237개로 74개 감축된다. 이에 따라 가장 방대한 서울대 본부의 경우 현재 22개과에서 16개과, 공주대(통합된 공주문화대 포함)가 19개에서 11개, 부경대와 경상대, 제주대가 15개에서 11개로 각각 줄어든다.

또 단과대학과 대학원에 설치

된 행정실도 현재 대학원 22개, 단과대학 178개 등 200개에서 138개로 31% 줄어든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1월 20일 국립학교설치령과 서울대학교설치령,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 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3월 1일자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 2002학년도 건축학과

### 학부 5년제 실시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일부 대학의 건축학과 학부과정이 5년으로 연장된다. 교육부는 1월 22일 최근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2002학년도부터 5년제 건축학 학부과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국 대학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9년 6월 국제건축가연맹(UIA)에 의해 '건축사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최소 5년간 인증된 건축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간 건축사 자격 상호 인정을 위한 국제기준안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단, 이번 조치로 국내 모든 대학이 건축학과 학부과정을 5년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대학만 학칙을 바꿔 도입하게 된다. 내년에는 건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전국 110개 대학 중 서울대, 한양대, 경기대, 명지대, 홍익대 등이 5년제로 건축학과 학부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대학 학부의 수학연한을 4~6년으로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의학, 수의학 등 일부 학과만 6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번엔 건축학과도 5년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모든 건축학과를 의무적으로 5년제로 바꿀 경우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어 희망하는 대학만 자율적으로 학칙을 정해 5년제 건축학 학부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 이공계 석·박사

#### 인턴연구원 지원사업 시행

올해부터 이공계 석·박사 인력을 기업 및 국·공립 연구소 등에 파견하는 인턴연구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98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미취업 고급과학기술 인력사업을 올해부터 정규 예산사업으로 전환, 6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3월까지 1차로 이공계 석·박사 400여 명을 인턴연구원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1월 18

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관련기업 4,500여 곳과 대학 및 연구기관 500여 곳에 인턴연구원 채용 공고를 내고,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초 선정인원을 확정키로 했다. 선정된 인력은 1년 동안 월 각 100만 원(석사)과 130만 원(박사)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아 해당 연구소에서 인턴연구원으로 일하게 된다.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

교육인적자원부는 2월 6일 수업료 반환을 학생 중심으로 조정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령인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키로 하고 가능한대로 올해 대학 신입생부터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업료의 반환 기준인 총 수업일수는 현행 3등분에서 8등분으로 세분, 반환 기간의 간격이 줄 전망이다.

현행 규정에는 학기가 시작된 뒤에는 입학금은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수업료는 한 학기의 총 수업일수 16주를 기준으로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전(5.3주)이면 수업료의 3분의 1을 뺀 나머지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경과한 날부터 총 수업일수의 절반(5.3~8주) 이전이면 수업료의

절반을 뺀 나머지 ▲총 수업일수의 절반(8주)이 지나면 반환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정안은 총 수업일수 16주를 8등분, 2주 간격으로 나눠 입학~2주전까지는 수업료의 8분의 1를, 2주~4주 이전은 수업료의 8분의 2를 빼고, 나머지를 반환토록 하고 있다.

### 대학 기성회비 편법 운영 감사

감사원 관계자는 2월 8일 "기성회비와 학교운영지원비의 상당액이 교육시설 확충 등의 당초 취지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데 지적이 많다"면서 "이들 재원의 편법 사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제도의 폐지 내지는 다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정부가 올해 국립대 입학금 및 수업료를 5% 내에서 인상토록 권고했으나 상당수 국립대가 기성회비를 최고 10% 이상 인상하는 등 국고지원금 부족분을 기성회비 인상으로 충당,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들 재원은 장학금 지급과 실습기자재·도서 구입 등에 사용돼야 함에도 교직원 인건비는 물론 총장·교장 업무추진비와 접대성 경비, 직원 등의 여비 등에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의 기성회비는 국가예산이 미치지 못하는 긴

급한 교육시설의 확충이나 학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대학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대학의 장이 견도록 규정돼 있다.

감사원은 또 'BK21'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99년 사업시행 당시 연간 2,000억 원씩 7년 간 1조4,000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프로젝트인데도 선정 과정에서의 잡음과 각 대학의 사업비 운영 상 문제점 등이 계속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 ☾ 연구비 카드제 내년 도입

'2001년 세출예산집행 지침'이 발표 되었다. 기획예산처는 1월 31일 내년부터 연구기관이 정부부처에서 용역을 받은 연구의 연구비를 현금 대신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연구비 카드제를 의무화했다. 일부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비를 개인적 용도로 낭비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에 산으로 지원되는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연구비는 연구기관에 지급하되 세부 과제별로 한 개의 통장으로 관리되고, 연구자에게는 법인카드를 지급한다. 연구자는 이 카드로 현금 인출은 할 수 없다. 다만 카드 사용이 어려운 회의수당, 전산처리비, 각종 공과금, 비

싼 기자재 도입 등은 계좌이체 방법으로 연구비를 관리하기로 했다. 연구비 카드제가 적용되는 부문은 소액 기자재 구입,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인쇄비, 시약비 등으로 전체 연구개발비의 약 20%다.

특히 각 부처 중 연구개발 예산이 가장 많은 과기부는 다른 부처보다 앞선 오는 4월부터 연구비 카드제를 도입한다. 과기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연구비 카드제를 시범 실시해왔다. 기획예산처는 또 각 부처의 오·만찬비, 연회비, 회의경비 등 일반업무비 중 10% 이상을 절약하도록 했다.

### ☾ 20개대 특별전형 특감

오는 5월부터 시작되는 2002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을 앞두고 교육인적자원부가 3월 중순 각종 대입 특별전형에 대해 특별감사에 나선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월 11일 부내 감사인력을 총동원, 전국 20개 대학을 상대로 2001학년도 입시까지 실시한 재외국민 특별전형, 농어촌 특별전형, 각종 특기자 특별전형 등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사를 3월 중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대상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동국

대, 한국외대, 중앙대, 건국대, 단국대, 숙명여대, 홍익대 등 서울소재 주요 대학과 일부 지방대 등 모두 20개대. 감사대상 특별전형의 범위에는 최근 큰 파문을 일으킨 재외국민 특별전형과 농어촌 특별전형은 물론, 일부 대학에서 문제가 된 발명 특기자 전형, 어학 특기자 전형, 경시대회 우수자 전형 등 각종 특별전형의 유형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192개 대학에 대하여 재외국민 특별전형 실태조사를 실시해 1월 말까지 결과를 통보토록 했으나 대학들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있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사하기로 했다. 또 특허서류 위조 시비가 일고 있는 발명 특기자 전형과 토익, 토폴 등 어학 성적 위조설이 제기되고 있는 어학특기자 전형, 경시대회 입상경력 조작설이 나돌고 있는 각종 경시대회 우수자 전형도 중점 점검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 ☾ 대학마다 '입시 공정관리위' 의무화

교육인적자원부는 대입 전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 대학에 입학관리 전담 부서 설치를 권장하고, '대학입학전형 관리위

원회'와는 별도로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의무화했다.

공정관리 대책위원회에서는 ▲대학 입학 부정 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입학 전형 업무 담당자 및 시설의 관리와 통제 ▲수험생의 이의 제기에 대한 내부 심사 ▲대입 전형 전 과정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각 대학은 문제지는 6개월간, 대입 전형 관계 서류는 4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또 입학 뒤에라도 부정 사실이 밝혀진 수험생은 입학 자체가 취소된다는 내용이 모집 요강에 명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입학 부정이 발견된 대학들에 대해서는 '입학 부정 특별 관리 대상 대학'으로 지정, 행정감사는 물론 대학 평가와 연계해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 ● 대학 IT 관련학과에

#### 450억원 및 전문교수 지원

정보통신부는 우수한 IT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학과 신설과 증원을 이끌기 위해 대학을 포함한 147개 학교 정보통신 관련 학과에 시설·장비 구입자금 450억 원을 올해 안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학교는 ▲

대학원은 연세대, 고려대 등 34개교 ▲대학교는 경북대, 원광대 등 44개교 ▲전문대학은 두원공대, 순천제일대학 등 44개교 ▲실업계고교는 선린정보산업고교 등 25개교이다. 이들 학교에는 대학원의 경우 최고 7억 5천만 원, 대학교 5억 원, 전문대 2억 5천만 원, 고교 1억 5천만 원 한도에서 증원규모와 심사성적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학과가 신설된 경우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가 따로 인정되며 증원규모가 평균 넘게 늘었을 경우 특별 추가지원금(대학원, 대학교 1억 원, 전문대 3천만 원)이 지급된다.

또 정통부는 2월 14일 정보기술(IT) 분야 산업체·연구소 등의 전문인력 71명을 선발, IT관련 학과를 신·증설한 대학에서 전문교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산업 현장의 실무 경험과 대학의 이론교육간 괴리를 줄여 IT업계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교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올해 IT분야 학생 정원을 늘린 전문대와 대학, 대학원을 대상으로 교수 지원 신청을 접수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

해 객원교수 24명, 겸임교수 47명 등 71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17개 전문대학에 20명, 대학 및 대학원 40개교에 51명이 배치돼 전자상거래 등 e비즈니스, 암호, 수학, 정보보호 관련 소프트웨어, IT부품·소재 등 부문을 강의하게 된다. 객원교수의 경우 연간 3,500만 원, 겸임교수는 연간 1,500만 원 범위에서 2년간 정부지원을 받는다. 정통부는 교수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올 하반기에도 70명의 전문 교수진을 선발하여 대학에 지원할 계획이다.

### ● 지방 과학 진흥에

#### 450억 원 투입

과학기술부는 '지방과학기술 진흥종합계획'에 따라 올해 지역별 전략·특화기술개발,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지방대학 우수과학자 지원사업 등에 총 4백50억 원을 투입한다고 2월 15일 밝혔다. 전통 옷칠기술개발, 약초활용 생의약품 생산기술, 전통 보성 쪽염료 기술개발 등 지역별 전략·특화 기술개발 사업에 50억 원이 지원되며, 지자체 자문관 사업에도 지난해와 동일한 10억 원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소재 대학의



연구역량을 제고시키고 우수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해 45개 지역협력연구센터에 2백35억 원을 투입하고 지방대의 신진우수과학자에 대한 연구비로 1백58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과기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확정하는데 이어 총 37개의 지역협력연구센터(RRC)를 지정 5백86억 원을 지원하고 각 시·도에 모두 16명의 과학기술자문관을 선임했다.

### ☾ 'BK21' 지원금

#### 유용 확인되면

#### 사업 취소·삭감 방침

교육부는 허위로 서류를 꾸며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하거나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등 지원금을 유용해 적발된 사업단은 협약을 해지, BK21 사업에서 탈락시킬 방침이다. 또 대학원생 지원금을 사업단 운영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장·도장을 받아 관리하거나 학생들에게 일정 금액을 반납하도록 한 사업단은 해당 교수의 명단을 언론에 공표하고 국고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업비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다음달 중 'BK21 종합

관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 ☾ 논문 표절 목인 교수 해임

#### 정당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2월 16일 K전문대 교수 안모(52)씨가 S대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한 논문을 발표했다라는 이유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해임 징계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 교수는 공동연구자인 김모 교수가 논문을 표절했다고 하지만 안 교수도 표절된 석사학위 논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발표 논문을 조금만 읽어보면 표절 사실이 명백한 만큼 직접 표절하지는 않았더라도 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혹 안 교수가 표절 사실을 몰랐다 해도 논문 작성 책임자로서 공동연구자의 표절행위를 적절히 감독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안 교수를 해임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 ☾ 총장실점거 대학생 퇴학처분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치중 부장판사)는 2월 18일 대학 측의 학사 행정에 반발해 총장실 점거 농성 등을 벌였다가 퇴학당한 전 서울시립대 공대 학생회장 이모(23)씨 등 2명이 이 학교 공대학장 등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이씨 등에 대한 퇴학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들의 총장실 점거는 학교측이 학생회실 등 공간배정문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해 조성된 불신에 기인한 것으로 이씨 등의 퇴학처분에는 '학생운동 역학관계'를 변화시키려는 학생처의 의도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 등이 낙서와 기물파손 등에 대해 공개 사과한 점등을 감안하면 학교측의 퇴학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